

북한의 경제 정책과 남북 경협 전망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0년도 신년사에 있어서 남북 관계와 경협 부문의 특징은 남한의 경우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제의이고, 북한은 과학 기술 중시를 통한 경제 강성대국 건설이다. 신년사는 한 국가가 한 해 동안 역점을 두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운용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금년도 남북 관계와 경협 전망을 기늬케 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남북한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경제 정책과 남북 경협을 조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북한 신년사의 특징과 정책 조망

북한은 “당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 하에 “사상 중시, 총대(군사) 중시, 과학 기술 중시 노선을 틀어쥐고 올해 총진군으로 다그쳐 나가야 한다”는 신년 공동 사설을 발표하였다.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나, 다음 몇가지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공

동 사설에서 남한과 미국·일본에 대한 직접적·원색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과, 사상과 군사 부문 강조를 통한 내부 통제 강화 속에 과학 기술 중시의 경제적 실용주의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회복 성과로 당 중심의 경제 정책 운영 예상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이 경제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과 함께, 당 중심의 경제 정책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는데, 당 창건 55돌(10.10)을 전환기적 시점으로 삼아 정상적인 계획경제체제 복귀에 더욱 주력하고자 하는 당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 회복 여부는 북한의 대내외 경제 정책과 남북 경협을 조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에 이 문제부터 살펴보자. 북한 경제가 과연 회복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1998 99년에 들

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농업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1998년과 1999년과 같이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절박한 언급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는 보람찬 해였다" "지난해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인민은 유례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고 역설함으로써 최악의 바닥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외부 인사¹⁾나 북한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의 찰스 카트만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1999년 5월 뉴욕의 아시아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경제는 몇 달 전 바닥을 쳤다"고 언급했으며, 통일부 역시 1999년 북한 경제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²⁾ 실제로

지난 해 북한은 농업 생산을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면서 이모작과 양어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왔었다. 이러한 노력에다가, 기상 호조와 국제 사회의 비료 지원, 대규모 경지 정리와 농업 개혁, 감자 재배 활성화 등에 힘입어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외부 지원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의 관건

그러나 최근의 북한 경제 회복 조짐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증가된 식량 생산량 역시 2000년도 북한의 수요량을 채우기에는 최소한 100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농업성 김영숙 부상도 식량 부족분이 12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 더욱이, 최근의 경제 회복 조짐은 전력과 원자재 및 산업 설비 등의 개선에 의한 자생력 회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

1) 비록 친북 인사의 글이기는 하나, 북한이 심각한 자연 재해로 타격을 받은 해부터 연 12 회 북한을 방문한 강덕주는 1999년 1월의 평양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도시가 활기에 차있었다고 진언하였으며, 1998년 늦가을부터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姜德珠(1999, 12) "北韓崩壞論の崩壞に思う", 『統一評論』, 통일평론사;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1999, 12.10), "북한 붕괴론의 붕괴를 생각한다", 『KDI 북한경제리뷰』, pp. 26~35의 번역물 재인용).

2) 통일부(1999, 10.8), 「북한의 경제 희생 여부 판단」, (<http://www.unikorea.go.kr/kr/load/A14/A14255.htm>)

3) 북한의 이하섭 농업성은 1999년도 식량 생산량은 1998년에 비해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한국농촌연구원도 동기 동안에 8.5~23.1% 증가한 340.6~386.4만 톤으로 추정했다.

4) 김운근(2000, 1), "2000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통일한국』, pp. 52~54.

다. 단지 이는 외부 지원과 그동안의 저성장 균형에 의한 자율 반등적 성격이 강하므로, 90년대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 치유없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즉 지난해 북한이 받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중국의 코크스탄 지원을 비롯하여,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2억 달러와 사회 문화 교류를 위한 남측의 현금 지원 등은 북한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⁵⁾

따라서, 자력에 의한 경제 갱생에 한계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근의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외부로부터의 수혈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자 유치가 어려운 만큼, 외부로부터의 더 많은 지원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對서방국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의 북한 경제 회복의 관건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외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로동신문」 논평(2000. 1.3)을 통해 “우리는 미국·일본과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학 기술 중시와 실용주의 강조

경제 부문의 또 다른 특징은 과학 기술 중시와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 강조이다. 북한은 1999년을 과학 기술의 해로 설정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과학 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규정하고,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고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2차회의에서 과학 사업비 예산을 1998년에 비해 10% 가량 증액한 점이나, 11월에는 내각에 전자공업성을 신설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 정치와 경제 실익이라는 이중 전략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요 목표로 과학 기술 중시 노선을 내걸고 “온 사회에 과학 기술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경제 강국 건설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준 대목이다.

북한 과학원 이광호 원장은 3일 공동 사

5) 1999년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금강산 관광 대금을 포함한 약 6.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중국의 지원까지 포함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김장한(2000. 1), “2000년 북한 경제와 대외 경제 정책 전망”, 「북한뉴스레터」, pp. 1~8). 이는 순부가가치 측면을 고려한다면 1998년도 수출 5.6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 반향에서 “나라의 과학 기술을 최단 기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전자공학, 열공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 첨단 수준을 돌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올해가 1996년부터 시작된 ‘과학 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내포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양적 동원에 의한 생산력 증가에 한계를 인식하고 나온 불가피한 생산 증대 운동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하다.

사실 이 원장이 밝힌 분야는 지난 1991년에 설정된 ‘2000년 과학 기술 발전 전망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자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6 2000)’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 목표 내용을 보면, 북한은 전자공학 분야에서 32비트급(386급) 컴퓨터를 생산하고, 64비트급(486급)의 컴퓨터를 개발하며 산업용 로봇의 소형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은 올해 컴퓨터, 우량 가축 대량 번식 기술, 신약, 생산 자동화 설비, 정밀 유기 합성 재료 등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 사업의 선행 부문에 대한 생산 증대와 중공업 우선 전략 고수를 시사하였다. 공동 사설에서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을 사회주

의 건설의 전초전이고, 금속공업의 성장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철도 운수를 치켜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 창건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자면서 제2천리마대진군 등의 대중 노력 동원 운동 방식을 통해 주민 노력 배가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가 새 천년의 첫 해인데다 당 창건 55주년이라는 정치적 축전을 빛내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실적을 올려놓아야 할 입장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지난해부터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타게 됨에 따라, 경제 희생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를 ‘충진격의 해’로 설정하였으며, 북한 전역은 지금 강성대국 건설의 결의를 다짐하는 각계각층의 쫓기 모임과 군중 대회로 연일 들끓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도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체제 생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당 중심의 경제시스템 복귀와 과학기술입국을 앞세워 내부 단속과 경제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 창건 55주년이라는 기념적 사건에 걸맞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⁶⁾ 강화와 함께, 제2천리마 대진군 등의 사상 강화와 대중 동원을 통해 경제 재건 노력에 더욱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을 통

해 최대한의 대외 지원을 얻고자 노력할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북한의 반응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포용 및 햇볕 정책'이란 용어 사용대신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와 화해 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재강조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 구상은 미래의 '법적 통일' 보다는 현실적인 '사실 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집권 2기의 대북 정책 방향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통한 평화 공존·공영에 두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이는 또한, 지난 2년간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자체 평가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싸고 다소 개선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최근의 북일·북미 관계 변화 분위기를 감안한, 자신감에 찬 새로운 비전 제시이다. 특히, 반관반민의 국책 연구소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협의를 제의한 것은 북측으로 하여금 흡수 통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군사 부문이 아닌 경제 부문의 대화 창구를 우선 개설하고자 한

실사구시적 접근 방향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가 함께 참여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품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며, 현재 남북 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구축 등을 장단기 과제로 선정하였다.

우리 정부의 경제공동체 건설 제의에 대해 북한은 「로동신문」 논평(1.9)을 통해 “남북 관계를 경제 협력 문제로만 국한시키려 한 것”이며, “지난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기구를 만족시키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하고 나옴으로써 일말의 가능성이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반대하겠지만, 협의를 위한 대화에는 진전이 기대되기도 하다.

2000년도 남북 경협 전망

남북 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관계 개선과 경

6) 1999년 김정일의 현지 지도 69 회 가운데 경제 부문은 23 회(33.3%)로, 이는 1998년의 11.4%(총 70 회 가운데 8 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경제 부문의 현지 지도중에서도 만포시 구성협동농장의 협동농장 방문 5 회, 양어장 방문 5 회 등 농업 부문에 16 차례나 할애했다.

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부문의 강성대국 건설 차원에서, 남한은 관계 개선과 당국자간 회담 재개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도 올해 신년 공동 사설에서 경제난을 인정하고 실리 보장을 다짐한 것은 남북 경협 확대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부문이다. 경제적 실리적 접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체제 유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쌀과 비료 지원과 같이 실익이 되는 당국자간 남북 대화도 거부하지 않는 '선택적 수용'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는 당 창건 55돌을 맞아 김정일이 경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입장이다. 북한에서 남한의 경제학 서적이 읽혀지고 있고, 김정일이 박정희式 성장 모델과 새마을 운동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전언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성장 모형에 대해 학습하고 남한과 경협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 부문의 강성대국 건설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제2천리마대진군은 정부 주도 및 대중 노력 동원에 의한 압축형 성장 모형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새마을운동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경협

남북 경협에 대한 북한 입장과 함께 이미 예정된 사업을 고려하면, 금년도 남북 교역과 투자 협력 규모는 최소한 1999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년에는 경수로 본공사와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금강산 사업을 비롯하여, 삼성전자의 전자 부품 임가공 사업과 금강산국제그룹의 평화자동차 설립 계획 등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더욱이, 현대아산의 통천 경공업 단지과 서해안공단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남북 경협은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접어들어,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남북 경협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교역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내려졌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조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조치에 따른 북한 상품의 대미 수출 시장 개척 등으로 위탁 가공업을 중심으로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들어 정부의 후속 경협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논의가 섬유, 가전,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수로 본공사 착공과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서해안공단 사업과 통천 지역의 경공업 단지 착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모 물자와 장비 수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 교역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난 해말 삼성전자가 아태평화위원회 주관 하의 조선컴퓨터센터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개선무역총회사 등의 협력 실무 기관과 남북 경제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과 전자 제품에 대한 임가공 사업에서도 다소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자 부문의 임가공 사업은 북한 신년사에서 과학 기술 중시 방침과 맞물려 더욱 기대되는 부문이다.

투자 부문의 경험 사업은 예정된 금강산 종합 개발 사업과 경수로 본공사외에도,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따라 외국 기업(교포 기업)들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남한 기업과 합작으로 우회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소 활기를 띠 전망이다. 특히 서해안 공단 사업의 부지 문제가 매듭 지워질 경우에는, 착공 1 년만에 200 개의 경공업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된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 20만 평 규모의 통천경공업단지가 예정대로 상반기 내에 착공되고, 공단 조성과는 별도로 스키장과 골프장 등이 앞당겨 건설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통일교 계열의 평화자동차가 조선련봉총회사와 합영으로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포시 항구동에 연산 1만 대 규모의 유럽형 승용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평화자동차총회사'를 설립할 계획에 있다.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666만 달러의 협력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금년 4월부터 공장을 완공하여 최소한 일본 중고차를 대상으로 수리 및 개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⁷⁾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구상과 경험 활성화 과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구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험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장애 요인을 제거해나가면서 남북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증진시켜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 경험 활성화를 통해 상호 공존·공영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기반을 구축해나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구상과 경험 활성화 과제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일관된 대북 포용 정책과 정경분리 원칙 하에 현실적인 경험 활성화의 장애요인부터 우선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경험의 장애 요인은 북한의 경직적인 태도와 구매력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험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입

7) 「세계일보」(2000. 1.8. 1.24).

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분단 50년이란 긴 세월만큼 불신의 골 또한 매우 깊은 만큼 단기간 내에 북한의 경직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간 대화없이 민간 차원만의 경협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단기간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구상 실현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남북 경협의 목표를 북한의 경제 회복 지원 및 재건 전략을 통한 경제력 격차 해소와 구매력 향상, 민족 경제 통합이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관된 정경 분리 원칙과 대북 포용 정책을 견지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초보적 단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 및 경협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각각의 체제 인정과 안정 보장에 대한 상호 불신에 있는 만큼,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분단 50년간의 불실과 경쟁을 신뢰와 화해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남북 상호간의 보완성을 활용하여 남북 경협을 확대시켜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남북 경협의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자치 마련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측이 우선 추진코자 하는 사업과 민간의 경협 활동 장애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나가는 것이 공동체 구상을 실천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현실성있는 실천 방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경협 사업 및 정부간 협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이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현장에서 경협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북측은 우리와 어떤 부문의 경협을 원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998년의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4.30)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에 내린 486컴퓨터의 반출 허용 조치는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